

승자 독식 탈피 공감대 … 연동형 비례제 도입엔 입장차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되나

의석 배분방식·비례대표 비율 등 정개특위, 7대 주요쟁점 정리
3야 완전한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민주, 권역별 비례제로 절충안 제시
한국당,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검토

정치권이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까지 선거제 개혁을 놓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소선거구제(지역구 국회의원)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국회의원)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승자가 독식하게 돼 있는 이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그로 인해 이득을 봄 거대 양당은 제도 개편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뜰을 뭉쳐 선거제 개편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거대 양당이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선거제 개혁인가=현행 소선거구제로 아래에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괴리가 발생한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25.54%의 정당득표율로 41%(123석)의 의석을 점유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은 33.5%였는데 실제 의석점유율은 40.67%(122석) 이었다. 정당득표율로 보면 전체 300석 가운데 각각 76석, 100석을 얻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47석, 22석씩 더 얻었다. 반면 정의당은 정당득표율(7.23%) 대로라면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할 수 있는 21석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의석수는 6석(2.0%)에 불과했다. 국민의당도 정당득표율인 26.74%대로라면 80석을 확보해야 했지만, 실제 의석수는 38석이었다. 거대 정당은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되는 문제다. 드러난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정당이 실제 획득한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즉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례성은 대표성과도 연결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한법률인 만큼 비례성이 충실히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대표성도 더 강화될 수 있는 셈이다.

◇무엇을 논의하나=국회 정개특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주요 쟁점을 7개로 정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리했다. 이는 ▲의석 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권역의 구분) ▲비례대표제 개혁 등이다.

많은 전문가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최우선으로 꼽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 때문에 야 3당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선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가 정해진다. 여기에 지역구 선거를 통해 확보한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 정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30석의 의석을 보장해 준다. 지역구 당선자가 1명이면 나머지 29명은 비례대표로 채워준다.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면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단 의석수를 정하는 것을 전국 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가 핵심이다. 당시 선관위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서울, 영남, 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의석수 증가가 필연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총 50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갖고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지역구의 절반 이상이 돼야 최소한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석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는 "현재 300명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350~360명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떠나 인구수 대비 의원정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수준이기에 국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예상되는 다행제 구도가 현행 대통령제와 맞지 않다는 주장은 펴는 것이다. 여전히 수 시로 뭉치고 흩어질 수 있는 다행제는 현행 대통령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회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거나 않은 정치환경에선 과도한 정치적 혼란을 불

려울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각 당의 입장은=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완전한(전국 단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전면적인 연동형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비례제 연동 비율을 100% 아래로 조정하거나 권역별로 연동하는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은 영남과 수도권 지역구 상황이 다른 만큼 통일된 당론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의원 정수

를 증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한다는 입장 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의원 정수 증원이 불기하다는 주장은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 아니라는 해석을 낼고 있다.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망은=순수학派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10일에 걸친 단식 끝에 여야 5당은 끝내 연동형 비례제 도입 관련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 3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 국당은 당내 이경 정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선거제도 변천사

◇소선거구제=1987년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착수, 최다 득표자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의 개편에 합의했다. 이전까지는 선거구별 득표순 2인까지 선출하던 '중선거구제'였다. 중선거구제는 제4공화국 유신체제 당시 도입됐다. 선거 과정을 줄이고 공명선거를 보장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집권 여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총선에 소선거구제가 도입돼 224개 지역구에 22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됐다.

◇비례대표제(전국구)=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최초 비례대표제가 시행됐다. 당시 전국구는 지역 기반이 없는 군부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후 전국구는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1994년 제1당 우선배분 원칙을 폐지하는 통합선거법 제정을 계기로 전국구의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가

1988년 집권당 기득권 유지 위해 소선거구제 시행

1963년 첫 비례대표제…2005년 선거연령 21→19세로

선이 이뤄졌다. 2000년 16대 총선부터 '비례제대표제'로 명칭이 바뀌었다. 유권자의 표가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 방식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198조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로 배분했다. 유권자가 A 지역구 B 후보자를 투표했다면, 해당 유권자의 정당 지지 역시 B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라고 본 것. 현재는 이같은 방식이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1인2표제로 지역구 후보자 투표와 정당 투표를 분리시킨 뒤에는 유권자 선택과 선거결과의 비례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의원 정수=2000년 정치개혁법 특별위원회는 의원 정수를 기존 299석에서 26석 줄여 273석으로 확정했다. 이후 2001년 현재는 '선거구 인구 격차 비율이 2대1 미만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을 감안하여 3대1을 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04년 여야는 국회의원 수를 다시 299명으로 확대했다. 2012년 행정도시 세종시가 지역구로 추가되면서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 54석)으로 늘렸다.

◇선거연령=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48년 만 21세로 규정했다가 1963년 만 20세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로 다시 하향 조정됐다. 최근에는 정개특위에서 만 18세 하향 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수익성 좋은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38평, 사무실 전용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
- 매매 - 1억7000만원(일시불 조정가)
- 현재 보1500만원에 월80만원 임대중
- 문의. 010-6834-7400

다스코주

세라코주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테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 기관한 흐름을 예측하고 설계신 분
• 태양광발전소 기관한 흐름을 예측하고 설계신 분
• 태양광발전소 기관한 흐름을 예측하고 설계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신 분
3.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PC방업 유경험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사업부 유경험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기기획 영업 R&D	• 사업부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 태양광영업 경력자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경력자)	화 순
세 라 코	설계영업 영업 R&D	• 설계영업 경력자 • 설계영업 경력자 • 요업 관리학 전공자 우대	나 주

※ 접수문의: 담당자 05130-232, noul@daesco.kr, 접수기한: ~ 세종시까지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CM TECH
(주)씨엠테크 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 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 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